

전시작전통제권 단독 행사 추진의 방향

박 승 식*

목 차

- I. 머리말
- II. 작전통제권의 의의와 행사
- III. 전작권 단독 행사의 추진 배경
- IV. 전작권 단독행사 반대 논리
- V. 전작권 이양에 대한 미국의 입장
- VI. 결론 . 전작권 단독행사의 추진 방향

I. 머리말

우리 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의 환수를 추진하는데 대한 찬반 논란은 물론, 갈등이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다. 전작권 환수 추진에 대한 갈등은 표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정부에서는 전작권 환수라 하고 있는데,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전작권의 단독 행사가 적합한 표현이라 하고, 미국은 전작권 이양이라 한다. 현재의 전작

* 대전대학교 통일대학원 교수

권은 한국군과 주한미군이 공동으로 구성된 한미연합사에서 행사하기 때문에 전작권의 단독 행사가 정확한 표현이라 한다. 그리고 미국은 한국에서 6.25전쟁 시 유엔군에게 자발적으로 이양한 것을 한국군에게 다시 넘겨준다는 의미에서 이양이라 하고 있다.

전작권을 한국군이 단독으로 행사하려는 데 대해 전직 국방장관과 군 고위장성, 전현직 교수를 포함한 학계 인사와 변호사 등 지식인 총 700여명, 전직 외교장관과 대사, 전직 경찰간부, 기독교계의 지도급 인사, 각종 NGO 단체들이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제까지 정부 정책에 대해 전직 장관과 고위직 인사, 교수와 지식인, 그리고 많은 단체들이 공개적·집단적으로 반대한 사례는 없었다. 한편 미국의 일부 전직 국방장관과 장성들도 한국의 전작권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고 한국군에 대한 이양을 반대하고 있다.

정부가 전작권을 단독 행사하려는데 대해 많은 비판과 반대가 있는 데에도,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2006년 9월 14일 노무현대통령과 부시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전작권을 한국군이 단독으로 행사하는데 대해 원칙적인 합의를 하였다. 전작권을 포함한 한미 군사 현안에 관해 2006년 10월 워싱턴에서 개최된 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 추진방안을 협의하였지만, 아직 양국간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전작권 문제는 한국의 안보와 앞으로 한미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중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정확한 분석을 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가 전작권을 단독으로 행사하려고 추진하는 의도와 반대하는 이유, 미국의 대응, 그리고 앞으로의 추진 방향을 논구해 보고자 한다. 한미 양국이 전작권을 한국군이 단독으로 행사하는데 대해 합의하였지만, 실제의 추진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내용에 대해 중점을 두고자 한다.

II. 작전통제권의 의의와 행사

군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은 지휘권과 작전통제권(Operational Control)으로 구분한다. 지휘권은 작전통제권에 인사, 군수, 예산 편성 등의 권한이 추가되어 국군통수권과 같은 개념이다. 작전통제권은 지휘권의 명령을 받아 작전계획의 수립, 작전 명령과 통제하는 권한을 말한다. 작전통제권은 위기가 발생하지 않은 평화 시의 평시작전통제권과 적의 위협이 증대된 상태의 전시작전통제권으로 구분한다.

유엔군사령관이 한국군을 작전 지휘하게 된 것은 6.25전쟁 중인 1950년 7월 14일에 당시 이승만대통령이 “현 전쟁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한국군에 대한 일체의 지휘권(all command authorities)을 유엔군사령관에게 위임한다”고 보낸 서한에서 시작되었다. 유엔군사령관에게 작전지휘권을 이양한 것은 당시 한국군의 규모가 작고 전쟁수행능력이 부족한 상태라서, 한국군과 유엔군을 유엔군사령관이 통제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그리고 1954년 11월 17일 발효된 한미상호방위조약과 그 후 개정된 한미합의의사록에 작전지휘권이 작전통제권으로 변경되었다.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CFC: Combined Forces Command)가 창설되면서 작전통제권이 유엔군사령관에게서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이전되었다. 한미연합사령부가 창설된 것은 미국의 대외정책과 국제적 안보 환경의 변화에 따른 한미 양국의 합의에 의한 것이다.¹⁾ 1969년 3월 “아시아인의 방위는 아시아의 힘으로”라는 닉슨독트린이 발

1) 한미연합사령부의 편제 및 구성은 한미간 동률보직원칙에 따라 사령관은 미군 대장, 부사령관은 한국군 대장, 참모장은 미군 중장이고, 각 참모요원은 부서장이 한국군이면 차장은 미군이 맡고 부서장이 미군이면 한국군이 차장을 맡고 있다 (http://www.mnd.go.kr/8077/jungchaek/han/leftmenu3_1_1.html(2005년 11월 7일 검색))

표되었다. 그리고 미국은 한국에서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동시에 한국군의 현대화를 위한 5개년 계획을 지원해 주기로 하여 1971년 2월 주한 미 육군 7사단이 철수하였다. 이어서 해외 주둔 미군의 추가 감축을 공약하여 당선된 카터 대통령은 1977년에 4-5년 이내에 한국의 모든 지상 전투병력을 철수시킬 계획을 발표하였다. 카터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수 계획은 제1단계(1978~1979)에서 제3단계(1981~1982)에 걸쳐 모든 지상 전투병력은 철수시키고, 공군과 정보 및 통신부대는 계속 주둔시킨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1978년까지 3천 4백명의 병력이 철수하였는데, 한국은 주한미군 추가 철수를 반대하고, 1979년 카터 대통령의 한국방문을 계기로 철수계획이 취소되었다. 특히 1975년에 베트남이 패망하는 등 한국의 안보 불안이 증대되어 한미연합사령부가 창설되었는데, 한미연합사령부의 창설은 한미동맹을 새로운 차원으로 전개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미연합사령관이 행사하는 작전통제권 중 평시작전통제권은 1994년 12월에 한국 합참의장에게 이양되었지만, 위기 관리 및 정전체제 유지 등 6개 분야 작전통제권은 한미연합사령관이 갖고 있다²⁾ 한미연합사령부의 지휘체계는 양국의“국가통수 및 지휘기구(National Command and Military Authorities, NCMA)”로부터 작전 지침 및 전략 지시를 받아 한미군사위원회(Military Committee; MC)를 통하여 기능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³⁾ 평시에서 전시로 전

2) 한미연합사령부에 의한 한미연합방위체제는 한국방위의 전시대비계획 수립, 이 계획을 지원하는 연합전력의 증강, 양국의 군사력을 통합 운영하는 연합지휘체제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고 있다 그리고 유사시를 대비한 연합훈련을 하여 전쟁을 억제하고, 유사시에는 효과적인 연합작전을 수행하여 적을 격퇴시키는 것을 기본 목표로 하고 있다 한미연합군사령관은 '연합권한위사항(CODA)'에 의거 전시연합작전계획 수립 및 발전, 연합연습 준비 및 시행, 조기경보를 위한 연합정보관리와 한미간 정보공유 등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http://www.mnd.go.kr/8077/jungchaek/han/leftmenu3_2_2.html 참조 (2005년 11월 10일 검색)

3) http://www.mnd.go.kr/8077/jungchaek/han/leftmenu3_2_2.html(2005년 11월10일 검색)

환되는 것도 한미 양국 합참의장과 국방장관에게 건의한 뒤 양국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한쪽이 반대하면 전시로 전환이 불가능하다

한국군의 전투 방어 태세는 DEFCON(Defence Readiness Condition)이라 하는데 5단계로 되어 있다. DEFCON V는 적의 위협이 없는 안전한 상태이고, DEFCON IV는 적과 대립하고 있지만 군사적 행동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태인데, 우리나라에는 6.25 정전 이후 DEFCON IV의 상태에 있다. DEFCON III은 적국에서 대규모 부대 이동, 전시 비축물자 방출 등 전면전 감행 징후가 매우 높은 상태로서, 이 때부터 한미연합사령관이 전작권을 행사한다. DEFCON II는 적이 공격 준비 태세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때 발령되고, DEFCON I은 전쟁이 임박한 상태에서 발령된다.

III. 전작권 단독 행사의 추진 배경

1. 자주국가의 위상 제고

전작권 환수 문제는 노무현 대통령이 2005년 10월 1일 국군의 날에 “전시작전통제권 행사를 통해 스스로 한반도 안보를 책임지는 명실상부한 자주 군대로 거듭 날 것”이라고 한 후에 본격화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8월 15일 광복절에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국군통수권에 관한 헌법 정신에도 맞지 않는 비정상적인 상태를 바로잡는 일”이며, “작전통제권이야말로 자주국방의 핵심이요, 자주국방이야말로 주권국가의 꽃”이라고 하고, “확고한 한미동맹의 토대 위에서 진행되고 있고 미국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하였다.

정부는 자국 군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군통수권자(대통령)에게 없는 나라는 지구상에 한국을 제외하고는 한 나라도 없기 때문에 전작권 단독 행사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력과 60만 국군이 있는데, 전작권이 주한미군 2만5천명이 있는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있다는 것은 국군과 국민의 자존심의 문제라 한다. 주권국가로서 전작권을 미군이 사용한다는 것은 현재 한국의 국가 위상에 비추어 더 이상 허용할 수 없다고 한다. 전작권 단독 행사를 추진하는 정부는 전쟁과 같이 국가존망이 걸린 중요한 문제를 미군에게 계속 두는 것은 자주국가로서 위상에 맞지 않다고 한다.

2. 전작권 행사 능력 확보

1980년대 말 냉전종식으로 국제안보환경이 변화되었고, 한미 양국 모두 한미동맹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의 군사전략이 새로운 위협에 따라 변화되고, 한국도 안보에 대한 책임과 역할이 커져 전작권을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국방중기계획을 추진하면, 전작권을 단독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

앞으로 5-6년 이내에 한국군이 구비하게 될 개략적인 전력은 첫째, 합참을 개편하여 군사전략 수립 및 작전계획 작성 등의 전략기획·계획체계를 구축하고, 중심작전과 장차작전 수행기능 등을 보강하는 등 합동전구작전 수행을 위한 능력을 구비한다. 그리고 지상작전사령부와 후방작전사령부, 공군 북부전투사령부와 해군 기동전단을 창설함으로써 각군의 제대별 지휘체계를 정비한다. 전략제대 간 합동지휘 통제체계를 구축하고, 육·해·공군별 전술 C4I를 구축하며, 군 위성통신 체계를 확보함으로써 지형 및 기상에 제한 없는 통신을 보장하게 되어 전략-전술제대 간 실시간 지휘통제·통신이

가능하게 한다.

둘째, 북한전역에 대한 영상정보 획득이 가능한 다목적 실용위성이 가동되고, 전방향 위협 탐지 및 공중지휘통제가 가능한 공중조기경보통제기, 그리고 항공기에 탑재하여 영상 및 전자정보를 수집하는 전술정찰정보수집체계의 확보를 통해 한반도 및 주변지역에 대한 독자적 정보수집 능력이 구비된다.

셋째, 북한전역까지 정밀작전이 가능한 F-15K 전투기, 지상의 전략/전술 목표에 대한 선별타격 및 탄도탄 방어 능력을 보유한 전략적 해상 전력인 이지스 구축함, 은밀성과 탐지능력 그리고 수중작전 지속능력이 향상된 214급 잠수함, 장거리 정밀타격이 가능한 GPS 유도폭탄(JDAM) 및 SLAM-ER(항공기에 탑재 운용하는 장거리 공대지 정밀 유도탄) 등 정밀 유도탄을 확보함으로써 대화력전을 포함하여 중심지역의 핵심적인 전략표적 타격 능력을 확보하게 된다.

3. 한미동맹 체제의 유지 가능

전작권 환수협의를 위한 한미 간 관련약정(TOR)은 ①한미 상호 방위조약 유지, ②주한미군 지속주둔 및 미 증원군 전개 보장, ③정보자산 등 한국군 부족전력 계속 지원, ④연합대비태세 및 억제력 유지 하에 추진 등을 4대 기본원칙을 정했다. 한미 양국은 한미동맹의 발전과 주한미군의 지속주둔을 통한 지역의 평화·안보 유지 필요성에 대해 전혀 이견이 없으며, 이러한 입장을 바탕으로 전작권 단독 행사를 추진하는 것이라 한다.

한국이 전작권을 단독 행사하게 되면 한미연합사령부가 해체되고, 한국의 합동군사령부와 미국의 주한미군사령부가 각각 독자사령부로 운영된다.⁴⁾ 이러한 새로운 한미동맹체제에서도 한미의 안보

협의회의와 군사위원회 등에서 전략대화는 계속 유지하며, 한반도 방위에서 한국군이 주도적 역할을 하고 주한미군이 지원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한국이 전작권을 단독으로 행사하는 경우에 한미 양국군이 원활한 협력을 보장하기 위한 기구로 가칭 ‘군사협조본부’를 설치해 운영할 것이라 한다. 군사협조본부는 평시부터 10여개의 상설·비상설 기구를 설치해 계획 작성, 정보공유, 위기관리, 연습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기타 전투전술발전, 해외 군사협력, 군수지원, 지휘·통제(C4I)체계 등에 대해서도 협조할 것이라 한다. 새로운 공동방위 체제하에서 양국 군사당국은 평시부터 사전 징후 분석, 계획작성 등 전쟁수행에 필요한 모든 협조체제를 완비할 것이라 한다.⁵⁾

그리고 한국군의 육·해·공군 등 각군 작전사령부에 주한 미군의 해당 사령부 ‘작전협조반’이 파견되어 지원할 것이라 한다. 각 작전사령부는 현재의 해군작전사령부, 공군작전사령부, 특수전사령부, 그리고 2010년경에 현재의 1-3군을 통합해 창설되는 지상작전사령부 등을 말한다.

정부는 한미연합사가 행사하던 한반도 작전사령부의 기능과 역할을 한국 합참이 수행하게 되어도 현재의 한미동맹은 변함없이 유지되어 국가안보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 한다. 전작권의 단독행사는 냉전종식 후 새로운 국제안보환경에 맞춰 변화해 가는 동맹의 성격변화와도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한미동맹은 종전의 냉전형 군사동맹에서 자유민주주의, 인권, 시장원리를 공유하는 가치동맹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으로서 탈냉전형 동맹관계로 새롭게 발전하기 위한 것이라 한다. 한미연합사가 군사협조본부로 전환되어도 한미

4) 청와대 안보정책수석실, “한국이 주도하고 미국이 지원하는 공동 방위체제 전작권 환수 이후, 어떻게 달라지나,” <http://www.president.go.kr/>(2006년 10월 10일 검색)

5) 청와대 브리핑, “전작권 환수후 한국 주도의 한반도 방위 가능,” <http://www.president.go.kr/>(2006년 10월 10일 검색)

동맹이 약화되는 것이 아니고, 탈냉전 상황에 맞게 한국군과 미군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발전된 형태라 한다.⁶⁾

4. 위기시 자체적 대응 불가능

현재 한미연합사령관은 복잡한 지휘체계로 한국군의 위기관리능력이 제한되어 있다고 한다. 한미연합사령관은 유엔군사령관, 주한미군사령관을 겸직하고 있는데, 한미연합사령관만 한미 양국의 국가통수 및 군사지휘기구의 조정통제를 따르고, 나머지는 모두 미국의 국가통수 및 군사지휘의 통제를 받는다. 그리하여 한미 양국간에 북한문제나 한반도 안보상황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게 되면 한국은 전작권을 행사하지 못하여 안보에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⁷⁾

한반도에 위기가 발생할 경우에 한미 양국이 국가이익에 관한 해석이 다를 수 있는데, 이럴 경우 한국군은 독자적인 전작권을 행사하지 못할 수 있다고 한다. 전작권이 한미연합사령관에 있는 상태에서는 유사시에 한국군의 독자적인 한반도 위기관리가 불가능하게 되면, 한국은 더 큰 위기를 당할 수 있다고 한다.

IV. 전작권 단독행사 반대 논리

1. 현재 전작권의 자주적 행사 가능

정부가 전작권을 단독행사하는 것은 주권국가의 자주성과 관련된

6) 조성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한미동맹의 미래,”

http://www.kfs.org/new/Dbview.html?sec_sort=4&no=1897(2005년 10월 5일 검색)

7) 같은 논문

것이라는 주장은 군지휘권과 전작권의 개념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 전작권은 군지휘권 중 전쟁수행시 필요한 정보, 전투편성, 전투작전에만 국한된 것이며, 한미연합사도 양국 대통령, 국방장관, 합참의장간의 협의체인 국가특수 및 지휘기구, 군사위원회의 전략지시를 이행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한국 대통령이 자주적으로 군통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⁸⁾ 그리고 한미연합사령관이 전시에 모든 한국군대를 지휘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군 중수방사와 2군은 전작권 범위에 제외되어 전시에 7개 연합구성군 중 4개 구성군은 한국 장성이 전작권을 행사한다.

2. 비현실적인 북한관과 안보의식

북한은 우방인 중국과 러시아가 만류한 가운데서 2006년 7월 5일 미사일을 집단 발사하였고, 10월 9일 핵실험을 하였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개발이 북한 입장에서 일리가 있다고 하거나 미사일 발사가 한국에 대한 위협은 아니고 공격목표로 한 것도 아니라고 한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의 군사력 증강이 정부나 일부 진보집단이 판단하는 것과 같이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은 실제적이지 않다.

북한은 우리가 파격적으로 대북 지원을 하고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개발 등을 하여 경제협력을 하는 데에도 장관급 대화를 중단하고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장 건설을 중단시키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 북한은 아직도 대남혁명을 추구하면서 군사력 증강에 치중하는 선군정치를 내세우고 있으며, 북한의 선군정치가 미국의 전쟁도발을 막아 남한도 큰 도움을 받고 있다고 선전선동을 하고 있다.

8) <http://www.ydi.or.kr/ydi2/work/issueView.do?cmd=cboardView&bid=1&no=1445>
(2006년 10월 10일 검색)

한편 북한은 과거에서부터 공식적·비공식적으로 주한미군의 철수와 전작권 환수를 주장하여 왔다 북한은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시부터 전작권의 단독행사를 주장하였고, 1995년 UN 총회에서 북한 최수현 외무성 부상은 “남조선 군에 대한 통수권이 미국에 있음으로 미국과 평화협정을 협상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북한이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을 남한에 반환하려는 것은 주한미군 재배치와 개편을 더욱 합리화하고 여기에 남한 군을 깊숙이 끌어들이기 위한 의도에 따른 것”이며, 미국이 남조선에서 자신들의 군사적 지배체제를 더욱 확대·강화하기 위한 책동”이라고 비난한다.⁹⁾ 미국은 “남조선 당국에 선심을 쓰는 척 하면서 많은 문제에서 저들의 일방적 요구를 실현시키자는 것”이라며, “남조선에 대한 영구강점기도를 실현해 북침전쟁수행의 전초기지를 더욱 강화 하자는 것”이라 한다.¹⁰⁾ 북한은 미국의 전작권 이양이 미군의 신속기동군화 전략에 따른 조치로 오히려 북침능력과 미군의 남한시배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남한의 전직 국방장관들이 전작권 단독행사 추진의 중단을 요구한데 대해서는 “미제 전쟁 머슴꾼의 망동”이라 하며, “침략자와 그와 한 궂인 친미사대분자, 호전광 무리를 모조리 없애야 한다”고 하고,¹¹⁾ “침략군을 계속 남조선에 붙들어두고 그들의 힘을 빌어 한생 품어온 북침야망을 실현해 보려는 것으로, 천추에 용납 못할 반(反)민족적인 범죄행위”라 하였다.¹²⁾ 북한은 미국이 전작권을 한국에 이양하면 전략적 유연성으로 북한을 공격할 수 있다고 비판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남한의 갈등을 유발하려는 이중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9) 평양방송, 2006년 9월 13일

10) 노동신문, 2006년 9월 19일

11) 로동신문, 2006년 8월 6일

12) 조선중앙TV, 2006년 8월 11일

전작권 단독행사에 반대하는 입장은 정부가 북한의 침략 가능성을 경시하고 전작권 문제에 대한 북한의 이중적 태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리하여 정부가 전작권 환수를 추진하는 것은 친북적인 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심각한 안보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3. 전작권 행사 능력 부족

한국군이 전작권을 행사하는 데에는 첫째, 한국은 전작권을 단독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한국이 전작권을 단독 행사하려면 (1) 정보 감시 및 정밀 타격 능력, (2) 합동지휘통제(C4I)능력, (3) 새 작전계획의 수립과 시험·평가 기간, (4) 신무기 구입과 숙달 능력 등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러한 준비가 매우 미흡하다. 전작권을 단독 행사하려면 주한미군이 갖고 있는 작전능력과 전력을 확보해야 하는데, 전작권 환수 시기로 정부가 제안한 2012년은 물론이고 미국이 주장하는 2009년까지는 더욱 불가능하다

둘째, 북한은 장사정포가 170mm 자주포, 240mm 방사포(다연장 로켓) 등 1000여문이 있고, 스커드 미사일 600여발, 노동미사일 200여발, 화학무기(2500-5000t)등으로 무장하고 특수부대 10만-12만명, 병력이 117만여 명이다 현재 미군은 KH-12 정찰위성, DSP 조기경보위성, U-2정찰기, RC-135 등과 글로벌 호크 등 저·중·고도 무인 정찰기 등의 정보수집과 합동직격탄(JDMA)을 탑재한 주한 미공군 F-16, 다연장 로켓포 등이 북한의 장사정포를 무력화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북한의 스커드와 노동 미사일을 우리 군의 '현무', ATACMS 지대지 미사일(사정거리 300Km)로 공격하려면 미군 지휘통제(C4I) 지원이 필요한데, 전작권을 한국군이 단독으로 행사하게 되면, 이러한 지원을 받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특히 북한

의 핵무기, 미사일과 생화학무기 등에 대비하는 것은 한국군만으로는 더욱 한계가 있다.

셋째, 현재 한미연합사의 작전계획은 북한의 전면 남침을 대비한 '작전계획5027', 전쟁초기 수도권 방위를 위한 '작전계획5026', 북한 급변 사태에 대비한 '작전계획5029' 등이 있는데, 전작권을 단독 행사시에는 이들 계획을 폐기하고 한국군이 새로운 작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런데 한국군이 새로운 작전계획을 수립하는데 4-5년이 소요되고, 실제로 수년간의 훈련을 해야만 실전에 적용할 수 있다.

4. 국방비 대폭 증가

정부는 국군 현대화와 전쟁억제를 위해 621조원을 책정한 '국방개혁 2020'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국방개혁 2020'은 전작권 단독 행사와는 관련이 없이 국군의 현대화를 위한 것이라 하지만, 전작권 단독 행사도 고려한 것이다 따라서 전작권 단독 행사를 추진하지 않으면, 재원 중 상당 부분을 축소할 수 있다.

국방개혁 2020은 2012년까지 만도 162조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1)공중조기경보통제기(반경 700Km 이내 항공기나 함정 탐지) 4대 구입(약 1조 6000억원), (2) 정찰위성 성격의 다목적 실용위성, 군통신위성 3-4기 구입(약 6000억원), (3) F-15K 급 전투기 20대(약 3조원), (4) 이지스 구축함 3척(3조 6000억원), (5) 1800t 214급 잠수함 9척(3조 1500억원), (6) 북한 장사정포 공격 방어용 합동직격탄(JDAM) 900발(500억원) 등이다.

국방개혁안은 한국군의 첨단·정예화를 추구하는데, 이를 집행하는 데에는 예산과 첨단과학기술의 확보, 강력한 한미동맹이 필요하다. 예산의 확보도 어렵지만 예산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세계

최고의 과학기술이 발달된 미국의 협조 없이는 한국군의 첨단·정예화가 불가능하다. 한미관계가 긴밀하고 강력한 동맹이 유지되어야 미국이 한국군의 첨단·정예화를 지원할 것이다.¹³⁾

5. 한미동맹의 약화 문제

한미동맹은 확고한 동맹의지와 상호 신뢰의 공유가 중요한데, 전작권을 단독행사하게 되면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신뢰가 저하될 수 있다. 한미동맹은 북한의 남침 저지에 확고한 억제력이 되어 왔는데, 한미동맹 약화는 전쟁억제능력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전작권의 단독 행사 추진이 반미 및 미국을 자극하는 형태로 진행되어 전시에 미군의 적극적인 지원이 의문시 된다.

전작권을 한국군이 단독 행사하여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미국은 중대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한미간의 정치적 신뢰에 의해 군사적 지원과 협조를 결정할 것이다. 한미관계가 긴밀하고 신뢰도가 매우 높으면, 현재의 한미연합사 체제 수준의 미국 지원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이 북한 문제와 대북정책에 대해 이견과 갈등이 야기되면 전작권 단독 행사 후 미국의 군사지원을 확보한다는 것이 용이하지 않을 것이다.¹⁴⁾ 한미연합사의 제도적 장치가 없어지면 미국은 의무적인 협조가 아닌 상황에 따른 정치적 판단에 의해 군사적 협조를 할 가능성이 커진다. 즉 전작권을 한국이 단독으로 행사하게 되면, 주한 미군의 추가 철수가 이루어지고, 위기 발생시에 미 증원군의 감소가 우려된다. 미국의 전쟁수행법(War Power Act)에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해외 파병을 하는 조건 중 하나가

13) 송대성, “주한미군 재배치와 한미군사관계 현안과제,” [http://www.cubs-korea.org/spboard/index.asp?mode=content&num=210&readnum=2690&page\(2005년11월7일검색\)](http://www.cubs-korea.org/spboard/index.asp?mode=content&num=210&readnum=2690&page(2005년11월7일검색))

14) 이상현, “전작권전통계권 환수의 안보적 영향,” http://www.kfs.org/new/Dbview.html?sec_sort=4&no=1895

“미군이 직접 공격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다. 전작권이 한미연합사에 있으면, 한국에 대한 외부의 공격은 미군에 대한 직접적 공격에 해당되어 한반도 전쟁시 미증권군의 즉각 파병이 가능하다. 현재는 한국이 공격을 받으면 미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여 미군 60만 병력과 5개 항공모함전단, 3,000여대의 최신예 항공기 투입 등이 즉각 이루어진다. 이것이 ‘작전계획 5027’인데 전작권을 한국이 단독 행사하게 되면, 이 계획이 자동 폐기되어 위기 발생시 미군의 즉각 파병이 어렵게 되거나 지연될 수 있다

또한 한미연합사가 해체되고 한국군과 미군 사이에 군사협조본부를 설치한다고 하지만, 원활한 협조가 가능할 것이냐가 문제이다. 전시에는 긴급한 상황으로 의사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명령체제에 의해 임무 수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만 한다. 군사협조본부를 설치하여 한미간에 전시 작전수행에 대한 의견을 조정하는 협조체제를 제도화한다고 하더라도 한미간의 서로 다른 군 체제 하에서 원활하게 운영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현재 한미연합사의 체제에서도 중요한 군사기밀이 유출되고 이견이 많고 갈등이 표출되고 있는데, 한국군이 전작권을 단독 행사할 경우에 미군이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의 지원과 협조가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없다.

6. 실효성의 문제

한국군이 전작권을 단독 행사한다 하더라도, 전시에는 한국군과 미군 사이에 작전협조와 작전통제의 단일화가 불가피하다. 전투 작전에 참가하는 나라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군 작전 지휘의 효율성을 위하여 한 사람에게 통합된 작전지휘권을 부여하는 것이 작전조직의 원칙이다¹⁵⁾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작전의 효율화를 위해

15) 김성조, “한미연합사령부 해체는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해체로까지,” 북한, 2005년 1월호(북한연구소), p 32

전작권을 하나로 통합해야 하는데, 명목상 전작권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작전을 효율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유럽과 미국은 바르샤바조약기구가 해체되었어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정치, 외교, 군사협력기구로 발전시키고 있다. NATO는 회원국이 침공을 받으면 회원국들이 일정 군사력을 나토에 제공하고 나토군총사령관(미군사령관)이 제공된 군사력과 공격당한 당사국의 군사력에 대하여 작전권을 행사한다. 유럽에서는 미군인 나토군사령관이 작전권을 행사해도 국가주권의 침해로 해석하지 않는다.

전작권은 군사협력과 효율의 문제인데, 외교안보의 쟁점이 되어 사회분열을 심화시키고, 일부에서는 반미감정을 고양하는 수단으로 삼는 것은 본질을 왜곡한 것이다.¹⁶⁾ 현재 전작권을 한미연합군사령관이 행사하는 것은 (1) 한국군 장성이 한미연합작전을 수행할 수 없으며, (2) 미국이 개발·보유·운용하고 있는 첨단무기체계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한국군이 갖지 못하고 있으며, (3) 한국군은 현재 전략정보의 100%, 전술정보의 70% 이상을 주한미군으로부터 제공받고 있으며, (4) 북한 신호정보(SIGMINT·Signal Intelligence)의 99%, 영상정보(IMINT·Imagery Intelligence)의 98%를 전적으로 미군의 기술력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¹⁷⁾

7. 경제·외교적 문제

북한은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한 바가 있고, 북한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도 서해교전과 같은

16) 이상현, 앞의 논문.

17) 홍관희, “한미동맹 위협하는 작전통제권 환수를 철회하라,” <http://www.cubs-korea.org/spboard/index.asp?mode=content&num=210&readnum=2690&page=1> (2005년 11월 7일 검색).

행동을 하고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을 하였다. 한국군이 전작권을 단독으로 행사하는 가운데 북한의 대남 엄포와 도발이 재발되면 증권시장의 동요, 외국 투자가의 투자 환수 및 포기, 한국 기업에 대한 융자에서 위협금리 요구 등으로 경제문제가 심각할 수 있다. 현재는 한미연합사가 존재하여 북한이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하여도 심각한 안보 위협으로 인식하지 않아 경제에 파급 영향이 적은 편이다.

강력한 한미동맹의 경제 외교적 효과는 (1) IMF 당시 미국의 금융 지원을 비교적 용이하게 받을 수 있었고, (2) 2006년 7월 30일 동원호 선원이 11일간 억류 후 풀려났을 때 소말리아 인근 위험해역에서 안전지대까지 미5함대 소속 함정이 호위하였으며, (3) 한국은 재외공관 133개 중 공관장 포함 4인 이하의 미니공관이 85개 정도인데 미국의 지원으로 외교활동이 가능하고, (4) 외국에서 정변이 생길 경우 현지 공관원 긴급 철수 시에도 미국은 영국과 함께 한국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전작권을 한국이 단독 행사된 후에도 미국이 이와 같은 경제적·외교적 지원을 할 것인지 의문이다.

8. 정치적 위기의 반전 모색

한국 정부가 전작권 환수를 추진하는 것은 국내의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려는 것이라 분석하기도 한다. 2006년 2월까지 한미연합사령관을 지낸 리언 러포트 예비역 대장은 퇴임할 때까지는 전작권 이양 시점이 전혀 논의되지 않았으며, 여러 가지 안에 대하여 기본적인 논의를 하는 수준이었다고 하였다. 그런데 2006년 5월 31일 지방선거에서 야당이 완승하자, 대통령과 정부는 전작권을 반전의 대안으로 적극 추진하였다는 것이다. 지자체 선거이후 2007년 대선까지 대통령과 정부는 불리한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한 대안으로 이념

대립이 극심한 외교 안보 분야인 전작권 환수를 선택한 것이라 한다 18)

그리고 전작권 환수 추진은 노무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할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한다. 북한은 서해북방한계선(NLL) 재조정, 주한미군철수 및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전작권 환수는 단계적으로 주한미군철수와 NLL 재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전작권 환수를 통해 남북정상회담을 하여 불리한 정치상황을 반전시키고, 지지를 제고하려는 것일 수 있다.

한편 북한에 급변 사태 시에 북한을 관리하기 위해 전작권이 필요하다 고 하는데, 휴전상태에서 북한 급변사태에는 유엔군이 주도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북한에서 한국군이 단독으로 작전을 수행한다 하더라도 중국이 개입한다면 한국군만으로 대응할 수 없다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위해 전작권 단독 행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데, 한미동맹은 북한의 무력도발을 억지하는 것을 기본목표로 하지만, 한편으로는 한국이나 미국이 북한에 대해 단독적으로 무력행사를 하는 것을 상호 통제하는 기능도 한다. 오히려 한국군의 전작권 단독 행사는 미국이 북한에 대해 자유로운 군사작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한반도 안정을 더욱 위협할 수도 있다.

V. 전작권 이양에 대한 미국의 입장

전작권 단독 행사 문제는 2005년 9월 28일부터 30일 개최한 한미안보정책구상(SPI) 회의에서 한국이 미국에 제의하면서 논의되기

18) 남성욱, “전작권 논란이 국내정치에 미치는 영향,” http://www.kifs.org/new/Dbview.html?sec_sort=4&no=1896

시작하였다. 미국은 한국의 제의에 대해 한반도 평화체제와 연계성이 있는 한미동맹의 비전, 지휘관계 등의 연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¹⁹⁾ 그리고 2005년 10월 21일 제37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한미 국방장관은 공동성명을 통해 “지휘관계와 전작권에 대한 협의를 적절히 가속화하기로 합의했다”고 하였다. 미국의 럽스펠드 국방장관은 ‘한미 양측이 전작권을 이양하는데 적절한 시기가 되었다고 판단하면 이양하게 된다고 한 바 있다. 2005년만 해도 미국은 전작권을 한국군에 이양하는 시기는 앞으로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기로 하였으나, 2006년에는 미국이 한국이 제안한 2012년보다 3년이나 앞당긴 2009년을 주장하고 있다.

미국이 전작권 이양시기를 조기에 하려는 것은 한국군에 전작권이 이양되면 자동 해체될 한미연합사가 실제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장기화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 미국은 실제적인 역할과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될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고 새로운 한미동맹관계를 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식한 것일 수 있다.

미국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한국에 미군을 주둔시켜서 안보의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반미운동이 격렬하고 한국 정부가 전작권을 환수하려고 하는데 대해 불만을 갖고 있는 것 같다. 한국이 전작권을 단독으로 행사하려고 하는데 미국이 반대하면 한국에서 반미감정이 고조되고 반미운동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 판단할 수 있다. 한국이 전작권을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지만, 미국이 전작권을 이양하지 않으려 하면 부작용이 더 커질 것을 우려한 것일 수 있다.

한편 한국에 전작권을 조기에 이양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을 하였을 수도 있다. 미국은 전작권의 한국에의 조

19) 연합뉴스, 2005년 10월 12일

기 이양으로 무기 수출의 경제적 이익,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확대하여 세계미군재배치계획(GPR: Global Defence Posture Review)의 유리한 추진, 한국에 전쟁이 발발할 경우 미군의 선택적 개입 등을 고려한 것 같다. 미국은 군사력을 기동성 있는 정보화군으로 변환시키기 위하여 군사혁신(RMA 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을 추구하는데,²⁰⁾ 전작권 조기 이양은 군사혁신에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 군사혁신은 해외 주둔 미군을 특정 지역에 고정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 필요에 따라 순환 배치하며 규모 보다는 전투능력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GPR은 단극체제 관리전략에 적합하게 해외 주둔 미군을 재배치하며 타국과의 동맹관계를 재조정하려 하고 있다. GPR은 특정 지역의 미군을 해당 국가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미국의 GPR 추진은 한국의 한미동맹의 방위비 분담의 증액을 요구하고, 주한미군이 담당하던 방위 임무를 한국군이 맡는 부분이 증가하고, 주한미군을 이라크로 차출하였고 점차적으로 주한미군도 감축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을 위해서 한국의 전작권 단독행사에 적극 동의하고, 전작권 이양 시기도 가능한 조기에 하기를 제안한 것 같다.

그러면서도 미국은 한국이 전작권을 단독으로 행사하는데 있어서 전제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버웰 벨 한미연합사령관은 작통권 이양 이전에 선결해야 할 다양한 과제를 제시하였다. 한국이 고려하는 전쟁의 성격과 적, 전쟁의 목표 설정, 평시의 전쟁 억제 효과, 그리고 한미연합사 해체시 어떠한 협력체제를 구축할 것인지,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 북한의 위협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지 등 안보전략에 근본적 질문을 제기한 바 있다. 그는 한국이 북한을 적으로 확실히

20) 이상현,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합의,” 정세와 정책, 2006년 2월호(세종연구소)

명시하고 한미연합사가 해체될 경우에 어떠한 태도를 취할 것인지를 제시하라고 한 것이다.

2006년 9월 7일에 벨 한미연합사령관은 “앞으로 3년간 집중적인 조직활동, 연습과 훈련 등을 통해 2009년까지 전작권 이양이 가능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전작권 이양의 전제조건으로 (1) 한국 정부의 전략적 전쟁 목표 및 전쟁의 최종 상태, (2) 한국군의 전작권 행사가 전시 미군 증원에 미치는 영향, (3) 지휘관계 변화가 유엔사령부 역할과 정전협정에 미치는 영향 등 3개 과제가 선결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특히 한미연합전쟁과 작전계획을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군의 목표를 명료하게 설정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벨 사령관이 제시한 전제조건은 한국이 전작권을 단독 행사하려는 협상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될 전망이다.

한편 미국은 전작권을 한국군에 이양하는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군사력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돌다리 전력(Bridging Capital)을 제공할 것이라 한다. 미국은 한국군이 전작권을 행사하는 능력을 완비하여 전쟁억제능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여기에는 보완전력, 정찰, 감시장비와 지휘통제자 동화체계, 북한 미사일 타격전력 등으로 구성된다고 하였다. 이는 한국군이 전작권을 단독 행사하는데 전쟁억제능력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VI. 결론 : 전작권 단독행사의 추진 방향

앞으로 전작권을 한국이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어야 하겠지만, 이는 객관적인 분석을 하여 추진해야 한다. 한미양국간에 한국군이 전작권 단독 행사에 대해 합의하였지만, 그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 중이다. 전작권 단독 행사에 관한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한국이 전작권 단독 행사를 추진하는 데에는 비판 및 반대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해야 한다. 현대 전쟁은 대량살상무기로 인명 살상과 파괴력이 가공할 수준이라서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국가안보 정책은 전쟁수행능력보다 전쟁을 예방하는 억제능력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주한미군은 한반도에서 전쟁억제를 효과적으로 하여 왔고, 북한도 미군이 두려워 전면적 도발을 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전작권을 한국군이 단독 행사할 경우에도 유사시에 미국의 지원이 현재의 한미동맹 수준으로 유지될 것인가가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를 우려하여 전작권 단독 행사를 반대하고 있는데, 이러한 반대 이유를 정부에서 진지하게 검토하고 분석하여 반영해야 한다. 전작권 단독 행사는 국내외의 전문가 의견과 국민적 합의를 통해 추진해야 하며, 이를 경시하고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것은 중대한 오류를 가져올 수 있고 갈등을 증폭시킬 것이다.

둘째, 한국군의 전작권 단독 행사는 한국 안보체제의 확립과 미국의 입장이 상호 일치하는 시기를 선택해야 한다.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이 대남공격을 할 수 없는 억지력을 충분히 갖추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문제 등이 해결되고 군축을 통한 평화체제가 구축되었을 때가 바람직하다. 그리고 미국과 국제적 신뢰 및 군사적 협력을 현재의 한미연합사 체제 수준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보장을 하는 경우에 전작권을 단독 행사해야 할 것이다.

셋째, 우리 정부가 자주국가나 자존심을 내세워 전작권 문제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 국가이익의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6·25전쟁과 전후 주한 미군과 한미동맹이 한국의 자주권을 침해한 것보다는, 우리가 얻은 국가이익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한국이 한반도의 비핵화, 시장경제, 평화통일과 민주주의 가치를 추

구하기 위해서는 한미동맹은 기본적이다.²¹⁾ 그리고 한미동맹은 세계적으로 가장 성공한 동맹으로 북한의 대남공격을 억제하는 기반이 되어 왔으며, 한국은 안보 부담을 경감하였고, 경제성장을 하는데 큰 도움을 받았다. 현재도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은 안보는 물론 외교와 경제적으로 막대한 이익을 주고 있는데, 전작권 단독 행사로 한미동맹이 약화된다면 막대한 손실을 가져 올 수 있다 전작권을 단독 행사해서 명분과 형식적 자주성은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안보 문제와 국민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므로 전작권 단독 행사는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현명하다.

넷째, 현재 한미양국은 동아시아 전략, 대북 억지전략, 일본의 재무장 등을 논의하고 있지만, 한미동맹이 약화되면 미국은 주변 강대국들과 직접 협의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 외교적으로 고립되고 주변 강대국들에 종속되어 현재보다도 자주성이 더 손상될 수 있다. 남북분단은 민족 내부의 성격과 국제적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데, 작전권 단독 행사 추진으로 한미관계가 악화된다면 외교적으로도 막대한 손실이 될 수 있다.

특히 현재는 전작권 문제를 협의하는데 시기적으로나 상황이 매우 부적절하다. 한국의 진보적 단체가 반미운동을 전개하고, 미국의 전시증원훈련과 평택미군기지 이전 반대, 전교조의 반미 교육 등으로 한미관계가 매우 불편한 상태이다. 그리고 한국 정부와 미국은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의 인식과 대응, 인권문제, 경제적 압박 등의 대북정책에서 이견이 노출되고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인들은 노무현 대통령의 자극적 발언과 청와대 비서진들의 민족주의적 성향으로 한국의 주장에 대해 무관심하고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²²⁾ 이러한 가운데 자주국가나 민족 자존심을 내세우고,

21) 안병준, “한-미관계의 바람직한 방향,” <http://www.cubs-korea.org/spboard/index.asp> (2005년 11월 7일 검색)

22) 홍규덕, “한미 이혼 수속 중,” 주간동아, 제547호, 2006년 8월 8일, pp.24-26

북한의 안보 위협을 경시하여 전작권을 단기간에 단독 행사하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국내의 반미운동과 한미갈등은 미국이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병력구조의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미국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야 한다.²³⁾ 그리하여 전작권의 한국군 단독 행사는 장기 과제로 두고, 한미간의 국제적 신뢰와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 생각한다.

23) 이상현, “한미동맹 50년의 성찰과 한미관계의 미래,” 국가전략, 제9권 1호(세종연구소, 2003)., “주한미군 재배치계획의 배경과 한국의 대응방향,” 국가전략, 제10권 1호(세종연구소, 2004), p 30

| 참고문헌 |

- 김성조. 2005년. “한미연합사령부 해체는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해체로까지, ” 「북한」, 1월호(북한연구소), p. 32.
- 남성욱, “전작권 논란이 국내정치에 미치는 영향,”
http://www.kifs.org/new/Dbview.html?sec_sort=4&no=1896
- 송대성, “주한미군 재배치와 한미군사관계 현안과제,”
<http://www.cubs-korea.org/spboard/index.asp?mode=content&num=210&readnum=2690&page>
- 안병준, “한-미관계의 바람직한 방향,”
<http://www.cubs-korea.org/spboard/index.asp>
- 이상현, 2006.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합의,”정세와 정책, 2월호 (세종연구소).
- 이상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의 안보적 영향,”
http://www.kifs.org/new/Dbview.html?sec_sort=4&no=1895
- 이상현, 2003. “한미동맹 50년의 성찰과 한미관계의 미래,” 국가전략, 제9권 1호(세종연구소).
- 이상현, 2004. “주한미군 재배치계획의 배경과 한국의 대응방향,” 국가전략, 제10권 1호(세종연구소).
- 조성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한미동맹의 미래,”
http://www.kifs.org/new/Dbview.html?sec_sort=4&no=1897
- 청와대 안보정책수석실, “한국이 주도하고 미국이 지원하는 공동 방위체제. 전작권 환수 이후, 어떻게 달라지나,”
<http://www.president.go.kr/>
- 청와대 브리핑, “전작권 환수후 한국 주도의 한반도 방위 가능,”
<http://www.president.go.kr/>
- 홍규덕, “2006. 한미 이혼 수속 중,” 주간동아, 제547호.

홍관희, “한미동맹 위협하는 작전통제권 환수를 철회하라,”

<http://www.cubs-korea.org/spboard/index.asp?mode=content&num=210&readnum=2690&page=1>

연합뉴스, 2005년 10월 12일.

평양방송, 2006년 9월 13일.

노동신문, 2006년 9월 19일.

로동신문, 2006년 8월 6일.

조선중앙TV, 2006년 8월 11일.

http://www.mnd.go.kr/8077/jungchaek/han/leftmenu3_1_1.html

<http://www.ydi.or.kr/ydi2/work/issueView.do?cmd=cboardView&bid=1&no=1445>

Directions in Promoting Independence in Operational Control

Park, Syng-Sik

Former ministers of national defense and foreign affairs, intellectuals such as former and incumbent professors, and various NGO groups are demanding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o stop promoting independence in operational control which is currently held by the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Korea commander.

Although the Korea should exercise operational control independently in the future, orientation on the direction which should be taken under consideration in promoting this transfer should be assumed.

First of all, South Korea must sufficiently examine the criticisms and dissenting opinions, and reflect them in promoting independence in operational control. From now on,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hould reflect the opinions of experts in operational control, and must promote the transfer with national consensus. Unilateral enforcement of the transfer may cause serious errors and aggravate conflicts

Second, ROKA's exercise of independence in operational control should take place only after gaining restraint on North Korea's attack against the South, and the issues on nuclear

weapons and weapons of mass destruction(WMD) has been resolved, and a peace regime has been reached. Furthermore, exercise of independence in wartime operational control should be promoted only if there is a guarantee that international trust and the military collaboration will be restored to a level beyond the present state.

Third, the USFK and the Korean-US alliance is providing South Korea with national security, not to mention tremendous diplomatical, and economical benefits. However, if the alliance between the two countries become weakened due to the exercise of the independence in operational control, we might suffer a great deal of loss. Even though reasonable justification and external independence may be gained through promoting independence in operational control, it should be promoted in a longitudinal manner because national security problems and conflicts may be intensified, and there is no actual profit in doing so.

Fourth, if the Korean-US alliance becomes weakened and therefore the United States decides to discuss eastern-asia strategies, North Korea deterrence strategies, and Japanese rearmament issues with other neighboring countries, South Korea may become diplomatically isolated and a subordinate to surrounding countries, destroying the independence we have now instead of restoring it. Therefore searching for means to reinforce international trust and collabor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nd leaving ROKA's independence in operational control as a long term objective would be a more

realistic method.

Key Words : Operational Control, The US-Korean Alliance, Anti-American Movement Conflict between Korea-US, Weapons of Mass Destruction(WMD)